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1. 1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월 11일(수) 14:00~18:2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호, 제2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호 『디에스투자증권(주)의 (가칭)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증권사가 겸영으로 신기술업을 영위했을 경우 일종의 계열사의 금융상품 판매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예전에 증권사가 신기술내 조합원 모집을 대행할 경우 투자자보호 절차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도 있고, 그런 취지로 증권사가 인하우스(In-house) 방식으로 신기사들을 겸영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에서 여

러 가지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들이 자기 사모저축은행채를 자기 창구를 통해 판매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했던 적이 있었음. 그러한 것들을 아울러서 일종의 계열사 사모판매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증권사가 계열 신기사의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신기업을 감독하는 여전부문과 함께 계열사 판매 금지 여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호 『메리츠증권(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3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

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과태료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3건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함. 3건은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설명의무 미이행 과태료 10억 원,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10억 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2.1억 원임. 위 3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은 회사가 자체 적발 및 징계를 한 건임. 금감원은 회사가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지적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당사는 일반투자자인 개인의 전문투자자 전환절차를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1단계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즉,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로서 개인이 법적요건 구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면서 심사를 신청하는 단계임. 이 1단계를 거치면서 특정 개인이 전문투자자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비로소 전문투자자로 전환됨.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실제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시점, 즉 2단계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이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없는 1단계 서류제출 시점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어색함. 금융감독 당국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또는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라고 해서 여

기에서 ‘대우’나 ‘전환’이나 똑같은 의미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본 건 설명의무를 도입하였다.’ 즉, 전문투자자로서의 대우를 받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음.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에 2단계 서류 제출시 뿐만 아니라 1단계 서류 제출시에도 관련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지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협회 규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삽입된 것인바 우리 금융당국은 협회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밝혀 왔음.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으며 일반투자자로 대우받고 싶으면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설명을 그 시점에서 해 주면 충분하고 굳이 자격여부만 문제 삼는 1단계에서까지 위와 같은 설명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음. 따라서 투자자보호 관점에서도 본 사안에서 회사를 제재할 실익은 전혀 없음. 다음으로 두 번째 사안을 설명 드리겠음. 금감원에서 지적한 2020년 1분기 바로 직후인 2020년 4월 1일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어 위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되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사안의 경우 변경된 신법인 개정 규정이 적용됨. 개정 규정에 따르면 특정 분기에 투자자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연 1회만 확인하면 되며 당사는 이를 준수하였음. 결과적으로 금감원에서 지적하신 건들은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본 사안은 신법이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례를 변경한 핵심이유로 입법 기술상 구법에 따라 처벌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벌의 해석 시에도 당연히 위 법리가 적용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당시 부칙에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둘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두지 않았음.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신법이 적용되어야 됨. 참고로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 개정시에만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종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본 사안은 투자자 불편 야기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 개정이므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함. 결국 개정 규정에 따를 때 특정 분기에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관련 규정을 과거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구법에 따라 제재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구법에 따라 제재할 수 없음은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당연함. 마지막으로 미리 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13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집합주문을

내면서 신탁재산을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전혀 없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을 구분하고 있음. 집합주문은 펀드와 같이 여러 투자자들의 재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집합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함. 다만, 집합주문을 할 때 어느 신탁재산에서 얼마만큼 투자하는지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만약 나중에 투자결과를 보고 그것을 정할 수 있다면 신탁업자가 임의로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합주문을 낼 때 미리 사전배분명세를 정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임. 금감원에서 지적한 13건 중 12건은 모두 비상장사 단 하나의 종목을 신탁금액 전액으로 단 한 번에 매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 따라서 집합주문시 애초에 고객별 배분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신탁업자가 임의로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13건 중 나머지 한 건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신탁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안으로서 고객별 매도수량은 각 고객 별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보유수량과 동일한바, 매도수량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사전에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애초에 회사가 신탁재산을 배분하려고 해도 배분할 수가 없음. 즉, 금감원이 지적한 이 13건의 사안은 미리 사전에 배분명세가 정해져 있고 신탁업자가 임의로 배분비율을 정하려고 해도 정할 수 없는 사안임.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건 중 오늘 말씀드린 3건은 해당 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위원)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취지상 충분히 공감이 됨. 취지상으로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신청할 무렵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는 설명이 되지만, 법문상으로만 보면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고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 ▶ (진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개인이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맞음. 그러나 그 다음 밑에 내용을 보시면 결국 설명할 내용이 이제부터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일반투자자로 바꾸고 싶으면 신청하면 된다는 사실, 결국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2단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결국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지금 저희와 같은 2단계의 구조에서는 1단계 서류만으로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겠다고 설명할 수가 없음. 2단계 서류까지 제출해야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설명하고, 만일 앞으로 일반투자자로 바꾸고 싶으면 별도로 신청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법문의 표현상으로도 저희 해석이 맞지 않나 생각함.

○ (위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신 이유가 만약 1단계에서 일반투자자 본인이 나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전문투자자 요건 구비서류를 보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까지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계신 것인지?

▶ (진술인) 예전에 전문투자자 요건 구비와 심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다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개의 증권사에서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개개의 증권사는 여전히 연혁(沿革)적인 이유로 이렇게 2단계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음.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12건의 경우와 나머지 1건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12건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매수가격이 다 동일한지?

▶ (진술인) 당연히 각 투자자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위원)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사는 시점에 따라서 취득가가 달라져서 이것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전부를 사는 것이고 매수가격도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배분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수가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지?

▶ (진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주장의 취지와

동일함.

- (위원) 매도의 경우에도 다 비상장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도금액도 다 일치하는지?

▶ (진술인) 매도가격도 동일함.

- (위원) 규정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의무만 비교해 보면 연 4회 하던 것을 연 1회로 줄인 것이니까 규정이 완화된 것이고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신지?

▶ (진술인) 맞음. 확인의무와 통지의무를 비교하더라도 확인의무가 중하고 통지의무는 가볍다고 생각함.

- (위원)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과 관련해서 1단계에서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메리츠증권(주)이 심사결과를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면 그 심사결과를 받은 투자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증권사에 제출해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 (진술인) 그러함. 과거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심사를 하고 전환절차는 개개의 증권사들이 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 협회 규정에도 동일하게 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

- (위원) 만약 다른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주)과 달리 1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메리츠증권(주)에서 1단계 심사 결과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다른 증권사에 제출했을 때 그 증권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전문투자자로 대우해 줄 수도 있지 않은지?

▶ (진술인)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 것은 맞음.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실에서는 모든 증권사가 저희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협회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음.

○ (위원)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와 관련해서 총 550건 위반을 했는데 그중에 509건이 2020년 1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것을 완화해야 되겠다고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이듬해 1/4분기에 이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음.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4월 1일에 개정되어서 지금 이런 이슈(issue)가 생기게 되었음.

○ (위원) 그러니까 1분기 내에 개정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어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2020년 1분기에는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신탁 계약 체결할 때 비상장주식 단 하나의 종목을 신탁금액 전액으로 단 한 번에 매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신탁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는지?

▶ (진술인) 12건 중에 9건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다만, 3건의 경우는 사실은 똑같은데 형식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음.

- (위원) 금융감독원이 2017년 11월 29일~~에~~ 매매자산배분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위탁자는 OOOO을 주당 15,500원에 매수해 달라고 지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3,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오고, 또 위탁자는 OOOOOOOO, OOOO, OOOO 주식 각각을 37.4%, 35.18%, 25.2% 이런 식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분된 것을 보면 52.04%, 7.11%, 40.85% 이런 식으로 실제 운용결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진술인) 최초의 신탁계약서와 나중에 실제 매수 주문을 내서 체결된 거래를 비교해 보고 최초 계약서와 다르지 않느냐고 금감원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중간에 신탁계약 변경이 있었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변경계약서도 제출하겠음.

○ (위원) 지금 변경된 날짜와 매매한 날짜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 (진술인)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연히 변경계약이 먼저임.

○ (위원) 얼마나 가까운지 기억이 나시는지?

▶ (진술인) 저희가 변경 전의 신탁계약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을 조회한 화면을 출력해 왔음. 조회일자로 추측되는데 2017년 11월 29일로 찍혀 있음.

○ (위원) 계약 변경 일자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실제 매매날짜와 같다는 것인지?

▶ (진술인) 위원님께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사 신탁부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현재는 비상장사지만 미래의 IPO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찾아다님. 그 결과 어느 회사가 미래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다는 대략의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함. 그렇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고, 예를 들어 회사가 3억 원에 대충 조정을 했다면 3억 원 정도를 모으고 실제 그 돈을 가지고 구체적

으로 협상해서 맨 마지막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그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는 쪽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됐던 물량보다 조금 적게 팔면서 금액을 깎아준 경우임. 그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원래 전량을 사면 당연히 자산배분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싸게 산만큼 여전히 동일한 비율대로 배분을 하고, 싸게 샀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남게 됨. 그것은 각자 투자자별로 여유자금으로 단기에 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최초에 전부 살 때를 기준으로 한 배분비율 그대로 배정하였음.

○ (위원)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법 개정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왜 통지의무는 이행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를 해서, 그러니까 만일 저희가 예측했던 2020년 3월 20일경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면 저희가 3월말에 당연히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임. 통지의무는 E-mail이나 전화, 문자로 통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통지의무를 이행하려 했는데 날짜를 넘기는 바람에 둘 다 못했음.

○ (위원)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체 적발하고 징계를 하였음. 어떤 징계였는지, 그리고 위법이 아닌데도 왜 징계를 하였는지 궁금함.

▶ (진술인) 그 당시 저희 감사 쪽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음.

당시 회사 내에서도 이것이 왜 위법이나, 특히 당사자들은 많이 반발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자체 적발은 했지만 경징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 (진술인) 저희가 준법 관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음.

○ (위원) 투자자정보 확인통지의무와 관련되어서 통지의무라는 것이 별개의 의무인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큰 취지에서는 같은 규제 내지 의무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축소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셨는지?

▶ (진술인) 저희가 사전에 축소한 것은 아님. 규정이 개정되면 그 개정 규정에 맞게 통지의무를 이행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미처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통지의무도 결국은 못하고 확인의무도 못하는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관점에서 과연 구법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 법 취지의 원리상 적어도 구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만일 구법으로 제재하려고 했다면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 (위원) 사실상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신탁계약금액 전부를 매수자금으로 썼거나 아니면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전부를

매도했거나, 거래결과에 따른 자산배분이 다 확정(fix)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자산배분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 것인지?

- ▶ (진술인) 저희가 사전에 축소한 것은 아님. 규정이 개정되 그러함. 원래 집합운용하고 펀드 같이 여러 투자자로부터 통합(pooling)해서 같이 운용하고 그 성과를 같이 배분하는 집합운용하고, 그다음에 주식 살 때 한 번에 같이 주문 내는 매수주문을 집합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름. 우리 법에서도 집합주문을 허용하되 사전배분비율로 신탁업자가 장난을 못하도록 하는 의미인데 저희는 임의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2단계에서만 설명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제도의 취지에 크게 반하는 측면이 있는지?
- (보고자) 예를 들어 메리츠증권(주)에서 심사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가지고 B증권사에 가서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B증권사가 동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B증권사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전환하여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임. 동 사안을 위반해서 2단계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투자

자 피해가 있겠느냐는 질문은 사실 위반결과 부과되는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반결과에 투자자 피해나 그러한 부분이 없음이 반영되어 '경미'로 처분하였음

○ (위원) 예전에 지정심사를 협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 (보고자) 협회가 심사할 때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는다는 설명의무가 없었음. 이 조항이 금투회사한테 심사업무가 넘어가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설명 없이 지정심사서를 받는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겠다고 신설된 조항임.

○ (위원) 아까 진술인께서 금투업자들이 다른 곳에서도 1단계와 2단계 중 2단계에서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11개사를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그러니까 지정심사서류를 받는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음. 다만, 협회규정에 전환신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2단계라고 말하는 전환신청단계에서도 협회규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위원)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과 관련해서 개정 규정의 22의2호는 새로운 의미의 부과로 보이고 22호는 완화 규정

으로 보여서 의무가 완화되었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금감원은 舊금융투자업규정에 확인의무만 있지만 이때도 사실상 통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인지?

- (보고자) 연 1회 확인 및 분기 1회 통지로 바뀌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변경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의무가 규정 전·후로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 완화된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임.

○ (위원) 금융회사의 적극적 확인의무는 연 1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당신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라.' 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의무부과면에서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투자자들이 4번 이상 계속해서 통지에 회신하지 않아도 자기가 계약한 신탁계약이나 일임계약이 신탁업자나 일임업자 마음대로 정지되지 않음. 그래서 동 규정 개정은 투자자의 회신의무부담에서 완화된 것이지, 신탁업자나 투자 일임업자 입장에서는 매분기에 투자자의 상황을 파악해서 운용하는 재산운용에 반영해야 되므로 부담완화는 없다고 봄.

- (보고자) 추가로 질서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서법 제3

조제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러한 행위의 가별성이 소멸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얘기한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기존에 1/4분기 때 했던 행위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가별성은 신법이나 구법이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임. 가별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마지막 쟁점과 관련해서 만약에 회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신탁계약서에 비상장주식 단 하나의 종목을 신탁금액 전액으로 단 한 번에 매수하는 거래, 이와 같은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분기준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보고자) 신탁업자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거래조건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와 특정금액, 얼마만큼의 투자를 언제 하겠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그리고 회사는 계속 전체 신탁재산 비율대로 투자자들에게 매수결과를 배분하고 있고 그 배분은 언제나 신탁재산의 금액비율대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배분명세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각 신탁재산비율대로 집합하여 주문하고 배분하는 것은 집합운용으로 본다는 금융위 보도자료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최소한 효율적 거래를 위한 집합주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배분명세를 만들고 집합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아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다 있다고 하였는데, 회사의 주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음.

- (보고자) ‘한 번에 주문한다.’ 이런 것은 없음.

○ (위원) 1단계 심사를 받은 다음에 2단계를 다른 증권사에 가서 신청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

- (보고자) 직접적인 사례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고, 그런 경우 주거래 증권사에서 지정확인증을 받아 타 회사에 가서 분류절차를 통해 전문투자자로서 거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갖는 의문은 1단계와 2단계를 나눌 실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임. 만약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서 하는 증권사가 단 한 번에 서류를 받아 심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1단계에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단계에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1단계에서 설명하지 않고 2단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했을 때 투자자에게 실제 무슨 피해가 가는지 의문임. 그리고,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는 결과적으로 단순집행이나 운용의 재량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여기서 운용의 재량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종목, 수량, 가격을 말함. 그래서 저는 아까 금감원에서 설명한 대로 자산배분명세를 만든 다음에 한정적으로 집합주

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임. 마지막으로 투자자정보 변경여부는 확인의무와 통지의무가 서로 다른 의무인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연계된 의무라고 생각함.

- (위원장) 최종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을 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겠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첫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실익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 (위원)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취지 자체가 전문투자자 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에 있는 것 같음.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되지, 이것을 1차에 이행하느냐 아니면 2차에 이행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범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임.
- (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임.
- (위원장) 그러면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부분은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겠음.

- (보고자) 법을 보면 전문투자자 전환을 금융투자업자가 신청을 받아서 승인하는 구조는 아니고, 어떤 개인 등이 자기가 다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전환이 되게 되어 있음. 1단계, 2단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무적인 얘기이고, 법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은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시점이 금투업자가 신청서를 받아서 승인한 이후부터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법상으로는 이 개인이 일방적으로 금투업자한테 ‘나는 전문투자자다.’라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전문투자자가 된다는 것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실익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법과 시행령에서는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당신이 전문투자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고려사항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음.
- (위원장) 말씀하신 취지는 문리적 해석문제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장일치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은 설사 그런 문리적 해석이 있다하더라도 지금껏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취지를 감안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음.
- (위원장) 두 번째,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사전 재산배분명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 그런 것

을 마련할 필요성도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이견 없음.

- (위원) 저도 메리츠증권(주)이 실제로 운용 재량에 따라서 집합운용한 것으로 보여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임.
- (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금감원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음. 세 번째,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람.
- (위원) 주식 시장의 일반 규제법 그다음에 대법원 최근 판례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을 완화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는 고민이 있음. 개정과 동시에 확인의무가 분기별 1회에서 연간 1회로 줄었지만, 대신에 분기별로 통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새롭게 부과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면 과연 가별성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음. 만약 가별성이 없어졌다, 또는 완화되었다는 전제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것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텐데, 가지번호를 통해서 추가로 부과된 것과 한 묶음으로 보면 단정하기 어려워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임. 다만, 법령 개정 자체가 분기 직후에 이루어지고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양정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음.

-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2020년 1분기에 확인의무, 통지의무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임. 아까 회사가 답변하기로는 규정 개정이 1분기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회사가 확실히 게을리한 측면도 있어 보임. 그런 측면에서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행위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저는 원안에는 동의하지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저는 법이 완화됐다고 보는 의견임. 4번의 확인 중 1번은 예전과 동일하게 나머지는 예전보다 완화된 형태로 하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고,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감원은 구법을 적용해서 안을 만든 것이어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음. 저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임.
- (참여자) 어려운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고민이 있음. 그런데 엄밀하게 해석하면 확인의무와 통지의무가 구분이 되는 사안이고 1분기에는 통지의무는 없었고 확인의무는 연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위원장) 확인의무와 통지의무가 연계된 측면이 있고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금감원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위원님

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금감원 국장님이나 금융위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지?

- (보고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실무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 확인의무를 연 4회에서 연 1
회로 완화하고, 대신에 자진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통지의무
가 분기별로 새롭게 부과되어 있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확인의무가 다 없어지고 확인 대신에 분기별
로 통지를 하라고 법개정이 있었을 때라고 하면 과연 이것
이 우리가 신법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음. 신법에 의해서 확인의무가 통지
의무로 대체가 되고 그에 더해서 1년에 1번은 확인하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메리츠증권(주)이 신법에 따라서는 적법하
다고 얘기하는 근거도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금감원 원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함.

- (보고자)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관련하
여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맞는 것 같음. 그렇지만 행위
에 대해서 일종의 면제부가 주어지게 된다면 메리츠증권(주)
처럼 법에서는 엄연히 구비서류를 받을 당시에 그런 설명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변형되게 운영해서 법에
서 정한 문언상 또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태료에 대한 감경까지는
모르겠지만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법의 취지나 형해화 가능
성 관점에서 한 번 더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림. 그
리고,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분기별 확인이나 의무

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왔음. 그리고 가별성 측면에서도 개정 전·후로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소수의견이 있었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재논의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따라서 제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음. 감경을 고려하는 부분들을 양정에서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을 고수하되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신법 우선에 따라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주셨음. 저는 개인적으로 절충안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정에 감안하는 방안이 중립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임.
- (보고자) 위반 건수 자체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단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이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 실제 2020년 1분기에 투자자정보 변경확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주) 내부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실제로 개정되기 전이니까 2020년 1분기는 투자자정보 확인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부감사결과 그 부분이 적발되어서 조치한 건임. 양정에 추가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임.

- (위원장) 마지막으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20% 감경 반영해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에 이견 없음.
- (위원)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 (위원장) 그러면 이 4건 외에 다른 제재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 (위원) 저도 없음.
- (위원장) 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의무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통지의무는 신설 규제로서 행위 당시에는 없던 규제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모아주셨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도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의 경우 매매자금 입금시점과 매매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비추어볼 때 자기계산 여부와 매매관여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20건을 위반건수에서 제외하고 1건에 대해 자기계산으로 볼 수 없는

자금 일부를 매매금액에서 제외하여 위반결과를 ‘중대’에서 ‘경미’로 변경하여 의결하겠음. ★★★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볼 수 없는 자금 일부를 매매금액에서 제외하여 의결하겠음. 또한, ☆☆☆과 ★★★ 모두 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 감경을 적용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이외의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호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실시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호 『비상장법인의 2020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는 2003년 코스닥에서 퇴출되었고, 그동안 법인회생에만 집중하면서 더 큰 미래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기여를 확신하였음. 사회와 국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는 2021년 9월 13일에 2019회계연도에 대한 감사前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조치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그리고 금번에는 자본 변동표도 추가로 제출해서 위반 정도가 더 가벼움.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그 당시에 퇴사 인원이 많아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의도치 않게 제출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공시 자체는 법정기한을 준수했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네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회사에 2019년 7월 1일 입사해서 자산 1,00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를 처음 맡으면서 서류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실수하여 하루 차이가 발생했음. 단순 오류이고 회계적 오류나 불법적인 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네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다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당사가 지적받은 위반행위는 당사의 흡수합병 이전 소멸법인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현장감사 착수일인 2021년 1월 6일 주요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고 법정제출기한 이전인 2021년 2월 1일에는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음. 다만, 담당자 교체 후 새로운 담당자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을 하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사항을 등록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자료를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지정이라는 것은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되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음. 본 건은 소멸법인에서 발생한 범위 반 사항으로 당사 자체만 보면 회계부정을 저지를 우려가 큰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한 단계 감경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진술인) 외감법 제36조제2항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와 같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외감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합병 소멸법인의 위반행위를 존속법인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음. 회계법인 합병에 따른 외감법 위반 제재로서 소멸된 회계법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있었다라도 이를 이유로 존속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고려해서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다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주)와 관련해서 회사는 2월 15일 현장감사 착수일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인 것 같음. 자료를 보면 2월 15일 오전에 재무제표를 받았다는 감사인의 확인서가 있는데 이런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USB나 감사인의 확인서는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Email 송부가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해서 감경을 해 왔음.
- (위원) ○○○○○○○○○○○○○○○○○(주)와 ○○○○○○○○○○○○○○○○○(주)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음. 한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별도재무제표만 하루 늦게 제출했고, 다른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다 작성해서 제때 제출하고 그 외의 것을 이틀 늦게 제출해서 서로 비슷한 경우인데 하나는 '주의'이고 하나는 '경고'임. 하루 차이, 이틀 차이인데 조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현장감사 착수일 이전에 제출했는지 이후에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조치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안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6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유)◀◀◀◀◀◀◀는 2019년 5월 9일 ●●●에게 약 49억 원을 변제기 2019년 6월 30일로 정해서 대여하면서 (주)○○○ BW(신주인수권증권, 이하 BW) 약 180만주를 담보로 교부받았음. 그런데 ●●●가 변제일까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는 ●●●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를 제기하였고 가집행부 승소판정을 받았음. 그 후에 (유)◀◀◀◀◀◀◀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21년 7월 1일 (주)○○○ 주식 액면가액을 납부하고 BW 행사하면서 (주)○○○ 주식 약 499만주, 6.83%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공시하였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입금 미상환으로 처분권한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함.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에는 주권상장 법인이 대량보유 5% 이상이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 보유에 대해서

시행령 제142조는 금전담보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의 처분 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소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유)◀◀◀◀◀◀와 같이 BW와 같은 동산을 담보로 교부받았을 경우 처분권한이 언제 발생하는지, 즉 그것이 차입금 미상환시인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그 집행문을 부여해야지만 처분권한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겠음. 먼저, 민법 제351조는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가 대여금의 담보로 교부받은 BW증서는 법적성질이 권리질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질권자인 (유)◀◀◀◀◀◀는 대여금을 변제받을 시까지 담보물인 BW증서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지, 그 자체에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님. 그래서 (유)◀◀◀◀◀◀는 처분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집행방법에 의해서 질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BW처분권한 소송 진행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BW 권한을 행사한 후에 공시의무를 다 이행하였음. 결론적으로 (유)◀◀◀◀◀◀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통해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처분권한을 득한 이후에 BW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련 공시를 다 이행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대여금을 변제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 BW를 제3자에게 담보물 처분방식으로 처분할 수는 없었는지?

▶ (진술인) 변호사한테 문의한 결과로는 이것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양도했을 때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테니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음.

○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담보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니까 변호사의 얘기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것을 처분해야 된다,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다고 저희는 의견을 받았던 것이었음. 그래서 저희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으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시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은 그 시점에 저희가 즉시 공시를 했던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소비대차계약서에 보면 연체이자도 적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한이 됐는데 원리금이 상환이 안 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하다면 굳이 연체이자를 안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음.

- (보고자) 처분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처분하는 것은 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고자) 실제로 처분시점이 발생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이자와 처분권한 발생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호 『○○○○○○(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2022년 10월에 대표이사에 임명되었고, 일단 그전에 대표이사였던 ◆◆◆가 일임하지 않은 고객들과 같이 한 행위여서 제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 않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에 대해서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의결권 대리행사 제한 부분인데 이미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거의 확정되었다고 생각함. 다만, 대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리문제에 있어서 증선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음. 첫 번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주)이 했기 때문에 보유목적 변경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상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준 행위를 한 적이 없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주들이 ===와 ♣♣♣인데 이분들은 옛날부터 대상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주)과 투자일임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주제안이나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주)의 행위로 되어 ◇◇◇◇◇◇◇◇(주)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임. 두 번째로 ▼▼▼ 등 9인 관련 변동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이 ▼▼▼ 등 주주 9인에 대해서 처분권한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9인도 마찬가지로 ◇◇◇◇◇◇◇◇(주)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음. 다만, ◇◇◇◇◇◇◇◇(주)이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분들도 같이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판례와 학설은 일관되게 대리행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도 ◆◆◆가 한 것은 이 9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실제로 매도인은 ▼▼▼ 등 9인이기 때문에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처분권한을 취득한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변동보고의무를 누락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임. 세 번째 변경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장외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이 계약체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혐의사실로 잡고 있는데, 단순투자목적의 주식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사실을 신고할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주)은 어디까지나 단순보유를 했기 때문에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논리의 연장선상에 비추어 봤을 때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입장임. 마지막 의결권 대리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총 25명의 주주를 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서 행사하여 각 사람마다 10인이 되지 않음. 과연 이런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설사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이었고, 그리고 이 위임장을 해 주신 분들이 일반투자자들이 아니고 투자일임을 한 고객이거나 ◆◆◆의 지인들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고 또 경영진 측에서도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 걸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참작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희망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 대표에 대해 진술한 부분에 대한 저희 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감사 제안은 실제로 ◇◇◇◇◇◇◇(주)의 명의로 아니라 한솔인티큐브(주)의 주주 중의 한 분인 ==의 명의로 주주제안서가 발송된 것은 맞음. 그런데 ==에 대한 문답과 최종적으로 감사제안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조사해 봤을 때 실질적인 행위를 한 것은 ◇◇◇◇◇◇◇◇(주)이고 단지 ==의 명의를 이용해서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위원) ▼▼▼ 등 9인이 보유했던 주식, 지금 회사 측 대리

인은 이것은 처분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대리한 것뿐이고, 매수인과 ▼▼▼ 등 9인이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 등 9인이 매수인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한 것인지?

- (보고자) 저희가 확보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가 ◇◇◇◇◇◇◇◇(주)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도 ◇◇◇◇◇◇◇◇(주)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매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기관 통보조치로 상정을 하게 되었음.
- (위원) 감사선임 주주제안은 경영권 참여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굳이 ===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는 나이가 거의 여든에 가까운 고령이시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경영권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심. 그래서 ◆◆◆ 대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다.”는 정도로 진술한 것을 봐서 ◇◇◇◇◇◇◇◇(주)이 당시에 사명으로 그러한 경영권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2호 『(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28분 폐회)